

## “혁신도시 흔들지 말라”

정부 궤도 수정 움직임… 지역민들 “균형 발전 역행” 반발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수정 작업에 나설 태세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축소 및 변질이 이뤄질 경우,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 지역민은 물론,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은 “혁신도시를 흔들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대인을 마련중이라고 발표했다.

김재경 국토해양부 대변인은 “지난 3월 말 혁신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아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

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원수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과보다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불리하고 ▲높은 토지 보상비 및 기본시설비 등으로 고(高) 분양기에 따른 주택 미분양이 우려되며 ▲청사 신축으로 2조9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부가가치 효과를 과장했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가 국토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해 조사했으나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1조3천억 원대에 그치자 국토연구원 직원을 통해 부가가치 효과를 3배 이상 부풀려 4

조원대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공기업의 민영화 대상 범위와 방법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할 한전과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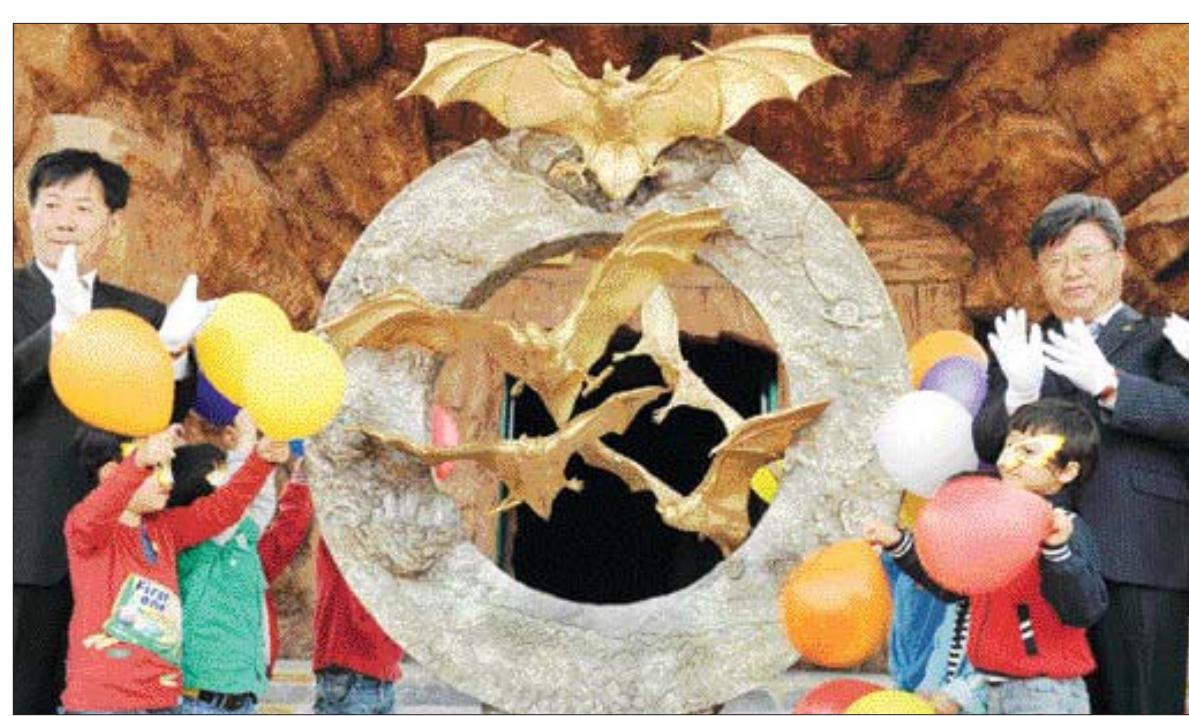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정치권 등 각계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미래 발전의 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이미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근간을 흔들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 실장은 “모든 신규사업이 경제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그동안 산업화 세력에 왜곡됐던 국가 발전 축을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정책 차원에서 주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민주당

4월 임시국회 합의



순금 162kg ‘함평천지 황금박쥐’

순금 162kg과 순은 281kg으로 제작된 대형 황금박쥐 조형물인 ‘함평천지 운기일주 대황금박쥐’가 15일 일반에 공개됐다. 흥익대 디자인공학연구소가 3년에 걸쳐 만든 황금박쥐 조형물은 가로 1.5m, 높이 2.18m로 원형 안에 황금박쥐 5마리를 형상화 했다.

/위직랑기자 jrwi@kwangju.co.kr

## AI 감염 우려 닦 수백마리 광주·화순 등 음식점 유통

경기 평택서도 AI 발생 전국 확산

점이나 당국은 고병원성 가능성에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 AI를 고병원성으로 간주할 경우 현재까지 신고 또는 발견된 AI의 심 사례 36건 가운데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것은 5개 시·군 21건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내에서는 이날 여수 화양면과 나주 남평면 등 2개 농장에서 AI로 의심되는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 지역의 경우 AI로 확진된 영암·신북면·나주 반남면 농가에서 20㏊ 면적에 걸친 393마리를 회수·매몰 처분했으나 나머지 101마리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특히 예산농장은 이미 AI가 발생한 지역이어서 화순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AI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또 이날 경기도 평택·포승을 석정리 소재 산간의 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17일에 확진될 예

한나라당·민주당

4월 임시국회 합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5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되, 규제완화 관련 법안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을 사안별로 논의해 처리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가, 대학등록금,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지 관련법 등 민생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한미 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 분리 완화 등은 논의가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 닭 가운데 494마리를 도축하지 않고 산재로 광주지역 음식점 6곳(239마리), 보성 3곳(115마리), 순천 5곳(30마리), 화순 5곳(75마리), 나주 3곳(35마리) 등 22개 음식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중 광주에 유통된 239마리를 포함해 총 393마리를 회수·매몰 처분했으나 나머지 101마리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특히 예산농장은 이미 AI가 발생한 지역이어서

화순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AI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또 이날 경기도 평택·

포승을 석정리 소재 산간의 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병

원성 여부는 오는 17일에 확진될 예



해당 학교는 시설여건, 학생 및 학부 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하게 된다. 국·영·수 등 정규 교과 수업이 금지됐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도 전면 개방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29개를 즉시 폐지하고, 규제상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한다. 또 정보공시제 실시와 연계된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도 6월까지 정비된다는 것.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 교육법 7조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우열반 편성을 규제한 수준별 이동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이 없어지면,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KT의 IT희망프로젝트  
모두의 IT를 위해  
IT서포터즈가 찾아갑니다

http://www.kt.com/ithope/ithope.html  
http://www.kt.com/ithope/ithope.html  
http://www.kt.com/ithope/ithope.html

IT를 나누는 KT

